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224호 1판 (음력 3월 3일)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광주형 일자리' 휘청이는데 직원 뽑고 아파트 짓고

광주시, 공장 5개동 건립 경력직 선발·행복주택 건설 중 노동계, 박광태 대표 교체 요구·사회적 합의 파기 선언 예고

전남에 방사광가속기 공동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공동 TF 구성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 지역 현안 상호 지원 합의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노동계와의 불화로 좌초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기본 정신인 '노사상생의 기반부터 다져야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광주시와 합작공장 신설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상생 노력은 뒷전인 채 관련 직원을 뽑고, 사원 아파트 마련에 나서는 등 속도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동계는 최근 청와대에 '신설법인 박광태 대표 등 임원 3명을 교체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거부 땐 청와대앞 등에서 합의 파기 선언식을 열겠다는의지까지 밝히고 나섰다.

호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역 현안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호남

권 상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다. 전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대학

개교, 전남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광주의 군공항 이전 등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사업의 추진이나 새로운 국책사업을 유

치하는데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

이다. 호남권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행정의

경계를 넘어 상생 발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함께 지역정치권, 지역민

의 현명한 양보와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25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

남지사,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 등은 광

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광주·전남·전북의 핵심 현안을 정부에

공동건의했다. 이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

속기 호남권 구축을 위한 공동 유치를 선

언했다. 호남권의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현안을 두고 상호 협력해 정부에 공동건

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정치

〈관련기사 3면〉

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계와 대화의 물꼬조 차 트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 같은 내 용을 전달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 를 보여 지역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법인인 ㈜광 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함평 일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공 장 5개동을 짓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는 484억원 (21%)을 투자한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시)이며, 2대주주는 437억원 (19%)을 출자한 현대차다. 광주글로벌모 터스는 최근 1차로 경력직 23명을 선발했으며, 추후 채용 예정인 800여명의 생산 직근로자에게 제공할 행복주택도 2024년

권에 호남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들어선 한전

공대, 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위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절실한 전남도가 광주의

군공항 이전, 전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

학 설치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급

물살을 탔다. 호남권 21개 대학 총장, 전남

22개 시·군 및 의회 등의 힘을 모은데 이어

광주, 전북까지 껴안아 4세대 방사광 가속

기 유치에 한 발 다가셨다는 평가다. 대통

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24일 영상회의로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

다는 시도민들의 여론도 작용했다.

까지 1, 2단계로 건설 중이다.

이처럼 빠른 사업 진행과는 반대로, 가 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노동계와의 관 계는 갈수록 악화하는 분위기다. 한국노 총은 최근 청와대측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전문가로 교 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의서를 저단해다

전 광주시장인 박 대표의 경우 사업초기 부터 전문영역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임용 반대 목소리가 거셌 다. 이 때문에 건의서에는 "보은 인사에 따 른 반감이 확대되고 있다. 각계각층 추천 으로 임원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는 주 장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 번 건의서 전달과 함께 다음달 7일 청와대 앞 등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 파 기 선언식도 예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 용은 청와대와 노동청을 거쳐 광주시에도 공식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기 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광주시)와 노동계의 골 깊은 갈등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빠른 사업진행 속에, 자칫 노동계의 반발이나 현대차의 변심,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 지연될 경우 인력과 시설유지·처리 등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동안 경험에서 자치단체의 대형사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 남도는 'F1' 대회를 잘못 유치했다가 경 주장 건설비 등으로 지방채 2900여원, 2010년 첫 대회 후 4년간 누적적자 1900 여억원 등을 부담해야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사상생형' 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 초되지 않기 위해선 다소 더디더라도 노동계와의 상생을 전제로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계의 기본 요구 사항인 비전문 대표 집단 교체, 적정임금·적정노동, 원·하청 상생 방안, 노사 책임경영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

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바라 보는 시각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김동원 고 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이날 언론 칼럼 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의 일자 리가 아니다. 기업과 노동조합, 지방 정부 를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 한 국민의 바람으로 엮어진 약속"이라며 "노사전문가들은 '노사민정 간 의견불일 치가 지속된다면 공장문을 연 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아예 접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쿄올림픽 내년으로 연기

광주·전남 선수들 '궤도 수정' 불가피

2020도쿄하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여파 로 2020년이 아닌 2021년에 열리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과의 전화 통화에서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21면〉

광주·전남 선수들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진민섭(장대높이뛰기·여수시청), 화순출신 임애지(복싱·한국체대), 전웅태(근대5종·광주시청) 등은 새롭게 훈련스케줄을 짜게 됐다. 올림픽 전에 열리는 국제대회입상을 발판삼아 올림픽 출전권을 노리는 '한국 여자 유도 간판' 김성연(29·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선수들에게는 새로운기회가 열렸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1896년 근대 올림픽 태동 이래 124년만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다. 전쟁으로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어도 전염병으로대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것도 최초다. 역대 동·하계올림픽에서 취소된 대회는 모두 5번 있었다. 사유는 모두 전쟁이었다.

하계올림픽에선 1916년, 1940년, 1944년 세 번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동계올림픽도 1940년과 1944년 대회를 건너뛰었다. 1916년엔 1차 세계대전, 1940년과 1944년엔 2차 세계대전이 지구촌을 각각 덮쳤다. 평화의 제전은 전쟁의 포화에 묻혔다.

일본은 그동안 두차례 올림픽 취소를 겪었다. 일본은 1940년 동·하계 올림픽을 자국 삿포로와 도쿄에서 치를 예정이 었다. 그러나 1937년 중국을 침략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1940년 올림픽 개 최권을 반납했다. 세계가 2차 대전의 격동에 휘말리면서 그해 올림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본은 올림픽 연기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게 됐다. 일본 전문가는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 약 7조3000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3가지 안건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다.

으로 신의어고 있다. /김진수 기자 ieans@kwangiu.co.kr

(안)' 등 안건 2건을 심의·의결, 충북 등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북의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들 사업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는 호남의 미래 성장동력과 도약을 발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

다"며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은

국토의 분산 배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

서 국첵연구시설이 없는 호남에 설치돼야 하며, 510만 호남인의 뜻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 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선 바 있는 광 주시도 전남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개 시·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핵심현안을 정부에 공동거 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조기에 시·도 기획실장이 참여하는 공동 TF (전담팀)를 구성해 2021년 말통합예정인 민간공항 명칭 문제, 군공한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지시를 대신해 참석한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도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 료대학원대학 건립은 취약지역인 전북에 반 도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함 께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강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